



## FTA 동향

### 관세청, '2017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FTA 활용방안 모색

관세청은 14일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원산지제도 활용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극복(Overcoming the tide of Protectionism with Origin System)'이라는 주제로 '2017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 관계자,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콜롬비아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주한 대사관 관계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영문 관세청장은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해서는 체결국 간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공유하고 조화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제적 원산지 쟁점의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각 계의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FTA 활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의 세미나는 통관  
원활화 수단의 일환인 전자  
원산지증명(Electronic Certify  
of Origin)의 세계적인 도입과  
현황에 관한 주제발표와  
원산지검증에 관한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으며,  
관세행정의 세계적인 변화와  
추세에 관하여 WTO 및 중국  
관세전문가의 'WTO 무역  
원활화 협정'과 '중국 통관  
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국가별 전자원산지증명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발표자로 나선 국제원산지  
정보원 안소영 팀장(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FTA정책연구팀)은 전자  
원산지증명은 WTO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에서 국경 간 서류  
없는 무역 같은 무역원활화의 큰 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며, 무역  
수속(통관)의 간소화 및 효율화 수단으로 국가적 단일 창구가  
마련되면서, 국가 간 통관 자료 교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다고 전했다.



안소영 팀장



엄정택 부장



박지영 사무관



Nicholas BURGE



이호준 관세행정관



이충렬 차장



단체사진

다음은 발표된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e-C/O는 전자원산지증명서이고 e-C/O System은 전자원산지증명서를 교환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즉 수출업체는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을 하고 승인당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승인(인증)하면, 해당 원산지증명서 데이터가 상대국 세관이나 은행 및 바이어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이다.

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25개 조사 대상국\* 중 92%에 해당하는 23개국으로 조사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가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아세안 9개국과 중남미 10개국 등

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여부 및 향후 계획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아세안이나 중남미는 지역단위 형태로 원산지증명서 및 제반 통관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세안의 경우 국가별 e-C/O 추진정도의 차이가 많지만, 대부분 WCO의 DM모델\*을 도입하거나 구축 중이다.



\* 세계관세기구의 데이터 모델로 2009년에 출시된 버전 3.0은 Single window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2012년에 출시된 버전 3.3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2013년에 출시된 버전 3.4는 ASEAN의 특혜원산지증명서(ATIGA Form D)를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은 아세안상품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ATIGA Form-D 교환을 위한 싱글윈도우\*를 구축한 상태이며, 이들 가운데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은 실시간 정보교환을 위한 현실구현단계(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FTA 특혜 관련 서류는 여전히 종이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단일창시스템) : 무역원활화의 일환인 단일창시스템의 구현은 무역관계자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관련된 제반 서류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남미국가 중 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는 인근 국가와 e-C/O 교환을 활발히 수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합 무역 시스템에 연계시켜서 전체 통관 서류를 한 곳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에 속하는 브라질은 ALADI 회원국들과 공통적 프레임워크 형식 하에서 e-C/O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e-C/O 교환을 시작했고, 칠레·파라과이·멕시코 등 여타 ALADI 회원국들과도 연내에 통일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은 2016년 12월부터 한국과 CO-PASS 시스템을 시행 중이었고, 2017년 4월 뉴질랜드와 동 e-C/O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중국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칠레·파키스탄



등과 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에 있고, 싱글윈도우는 상해나 천진·항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인도의 C/O 발급기관은 수출검사위원회, 수산물 수출개발원, 섬유위원회 이렇게 3곳인데, 이 중 C/O 조회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수출검사위원회 밖에 없었다. 현재 한국과 e-C/O 교환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에 있다.

일본은 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근래에 e-C/O 교환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진척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뉴질랜드도 근래에 중국·호주·아세안 등과 e-C/O 교환 시스템의 구축을 논의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국제통상산업부와 상공회의소에서 특혜원산지증명서와 일반증명서를 이원화 해서 발급하고 있고, 특히 국제통상산업부는 2013년부터 e-PCO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TIGA FORM-D 교환을 위한 싱글윈도우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고, My Trade Link를 통하여 ASW Implementation Phase(실시간자료교환)에 참여 중이다.

싱가포르는 관세청이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Global e-trade service(GeTS)를 통하여 C/O의 전자제출, 출력 및 조회, 광학 워터마크 기술, 스마트카드 사용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산업무역부와 상공회의소에서 C/O를 발급하고 있는데, 산업무역부는 2007년부터 전자인증서 발행관리시스템 ECOSYS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칠레와 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다.

칠레는 콜롬비아와 2009년 9월부터, 에콰도르와 2014년 6월부터 e-C/O를 교환하고 있고, 현재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다. 또한 베트남, 터키, 홍콩, 말레이시아와 원산지자료 관련 인증메커니즘 활용을 협상 중이다.

엘살바도르는 통합 대외 무역시스템을 바탕으로 C/O 발급 및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PDF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출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온두라스·코스타리카·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미국가와 SECA라는 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에 있다.

브라질은 ALADI 프레임워크 하에서 전자원산지 증명서인 COD를 발급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17년 5월부터 MERCOSUR 지침에 따라서 e-C/O를 교환 중에 있고, ALADI 회원국들과 추가적인 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WCO DM 3.5 프로젝트를 완료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데이터 표준화를 이루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MERCOSUR 지침에 따라 XML의 형태로 e-C/O교환을 이루고 있고, 칠레·우루과이와 e-C/O를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CO DM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간 프로젝트 전용시스템인 MODDA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e-C/O 교환의 확대는 기업의 통관시간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한-중 CO-PASS 시행 이후의 통관시간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한-중 C/O 교환 평균 소요시간이 시범기간에 비해 20시간 이상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비중이 크므로, 적극적인 e-C/O 교환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기업의 FTA 활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C/O 교환 시스템의 확대 추진은 ①C/O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지체가 많은 국가, ②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수행하는 국가, ③물류비용이 높거나, 그 절감효과가 큰 국가, ④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거나 교역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 ⑤원본 제출 의무가 엄격한 기관발급 국가를 e-C/O 확대 국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e-C/O 교환 확대의 적극적인 추진은 무역원활화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e-C/O 교환 확대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에 구축된 지역 간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공통의 형식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한국과 아세안의 e-C/O를 교환할 때, 아세안 개별 국가와 협상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아세안 공동체에서 어떠한 공통의 형식과 우리의 싱글윈도우를 같이 연계하면 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e-C/O 교환 확대는 WCO나 ISO나 UN 등의 국제표준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C/O 발급 현황 및 애로사항’의 주제발표에 나선 엄정택 부장(LG전자)은 칠레로 부터의 원산지검증을 계기로 사내에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관세청의 FTA 모의검증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니, FTA 활용을 통해 수입부품의 원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국 관세면제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도 제고되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FTA 체결 증가로 원산지 사후검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서 성급한 C/O를 발급하는 것 보다는 협정별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원산지 판정하고 C/O발급하고 그리고 관련서류도 잘 보관하는 사후관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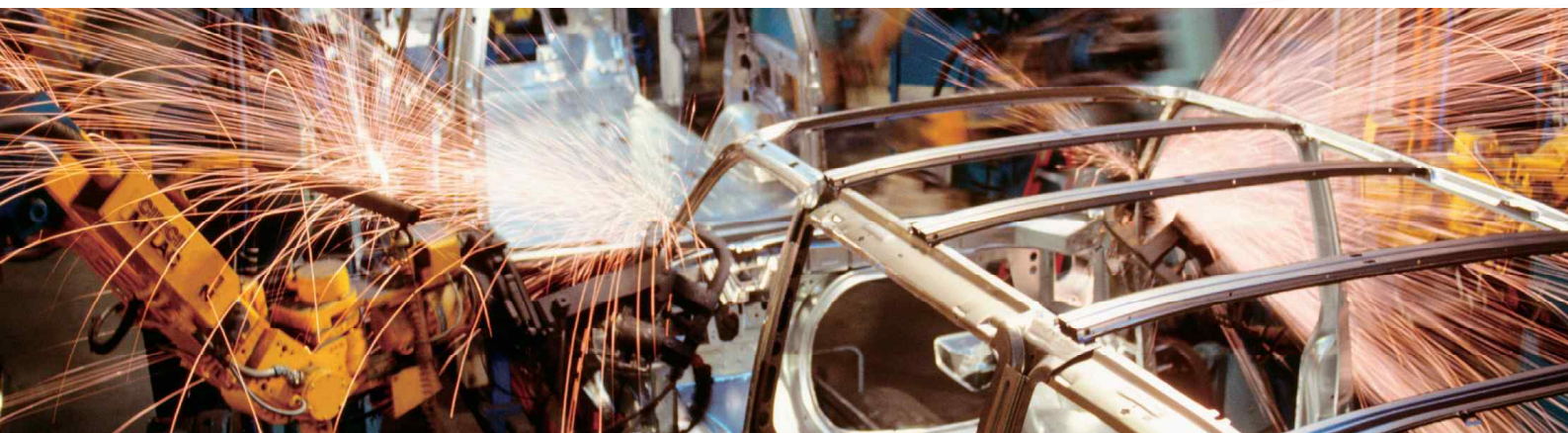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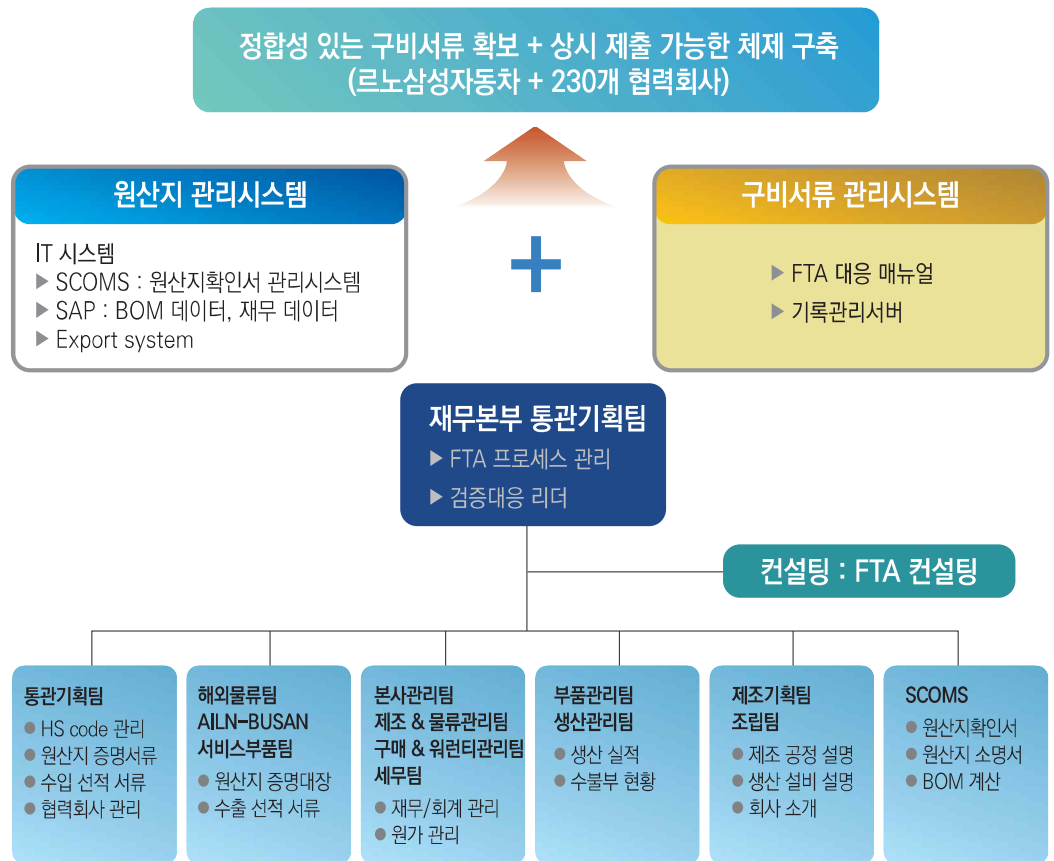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C/O 사본 불인정(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을 예로 들며 전자원산지증명(e-C/O)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EU의 원산지검증 프로세스' 주제발표에 나선 Nicholas BURGE (유럽연합위원회 대한민국 무역경제분야대표단 단장)는 한-EU FTA의 높은 성과를 치하하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양국의 효율적인 FTA 이행을 위한 EU의 원산지검증 사례 등을 설명했고, 원산지검증 대상 서류에 관한 의정서의 해석이 양자 모두 공통되도록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산지결정 중간재 기준과 관련한 '한국의 원산지검증 사례' 발표에 나선 박지영 사무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은 자동차와 유압브레이커에 대한 중간재 기준 적용 원산지기준 충족 사례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한 국가는 중간재 규정을 활용하여 FTA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표는 ‘원산지검증 대응 민관 협업 사례’를 이충렬 차장(르노삼성자동차)와 이호준 관세행정관(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이 맡았다. 원산지검증 민관 협업 사례는 지난 해 9월경 있었던 미국 측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 성공 사례로 ①원산지검증에 대한 사전준비, ②증빙자료의 보관, ③적극적이고 신속한 검증대응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관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영문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영문 관세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중국 통관정보 제공확대, 불법 유통 중국산 땅콩 원산지 단속강화, 식용대두 과세표준가격 조정, 가구 원부자재 역관세로 인한 관세율 불균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영문 청장은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 혜택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과 수출국 현지에서 중소수출업체에게 통관상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실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주요 내빈들

## 관세청, 'CO-PASS 개선 사업' 완료...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관세청은 22일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의 콘텐츠와 각종 기능을 강화한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CO-PASS)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CO-PASS란 국가간 전자원산지 증명서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브랜드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기업이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FTA 포털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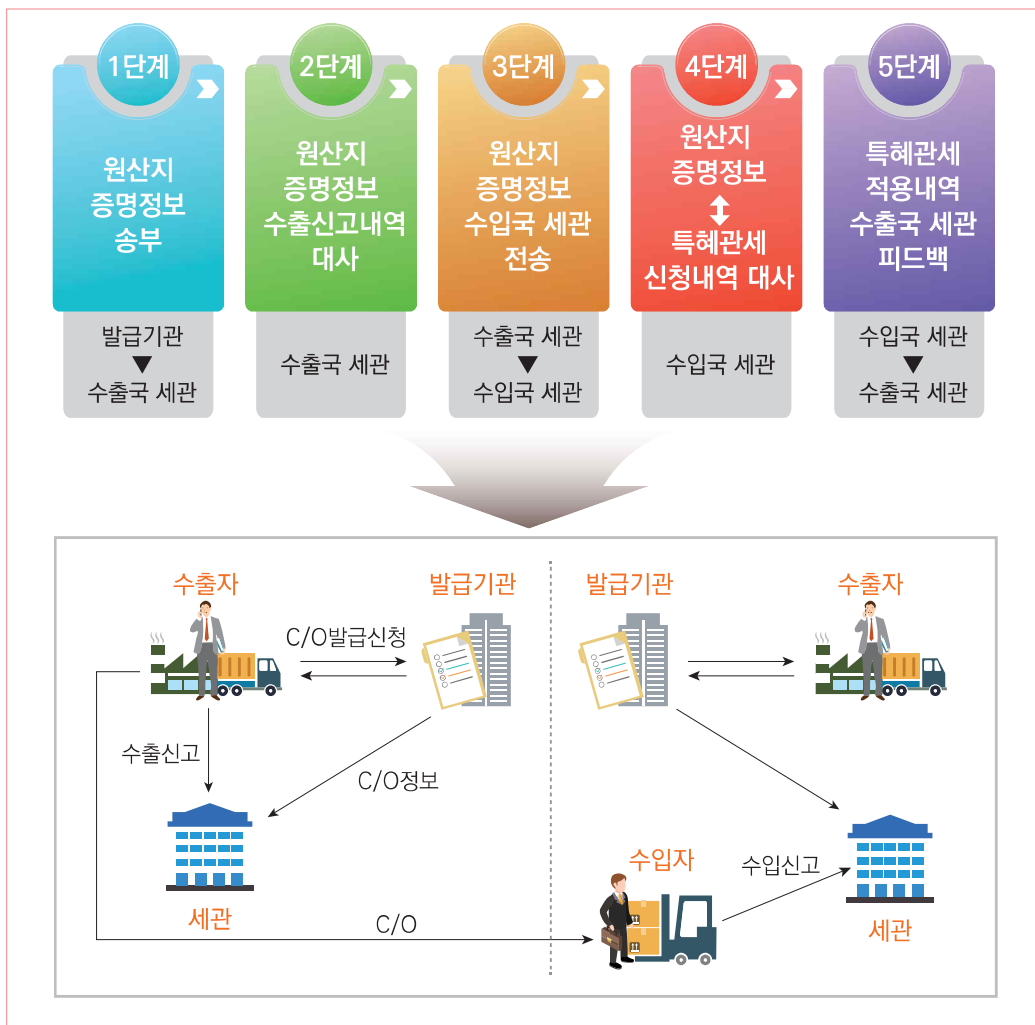
이번에 개발 완료한 CO-PASS 고도화 시스템은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C/O) 실제 자료 테스트 등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5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CO-PASS를 통해 세번별·지역별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입 활용률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률이 낮은 품목 및 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FTA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FTA 포털을 통해 중국 이외 인도·아세안 국가 등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내외부 사용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FTA 활용 설명회, 컨설팅 등에 참여한 25개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부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지난 9월 개최한 워크숍 및 실무자 회의 결과를 반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FTA 활용 시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O-PASS’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세청, 베트남 FTA 수출기업 CEO 간담회 개최

김영문 관세청장은 10월 31일 서울세관에서 전국 13개 베트남 수출 기업 대표와 함께 생생한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 베트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 역할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 됐다.



한편 베트남은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 우리나라와 2개의 FTA를 체결한 나라이기도 하다. 김 관세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업계의 애로와 건의를 적극 수용해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들도 한-베트남 FTA를 수출동력으로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FTA 활용 전국 순회 강좌 개최

관세청은 이번 달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3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베트남 현지 전문가를 초빙해 전국 순회 특별강좌를 개최하였다.

수출기업들의 요청으로 개설된 이번강좌는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에서 각각 2일 12시간 과정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함께 상대국 통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에서는 기업별 1대 1 상담을 함께 진행해 우리 기업이 FTA 활용을 통해 수출 증진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관세청, 2017 FTA활용 중소기업지원 우수사례 발표

FTA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매출신장과 고용증대를 이루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17 FTA활용 중소기업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금창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금창은 역대가공비율의 증가를 통한 원산지기준 충족으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 및 고용 증대를 이룬 사례가 높이 평가됐다.

관세청은 9월 27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세관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당일 발표된 7편의 사례는 FTA 활용,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농축수산물 FTA 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된 116편의 사례 가운데 2차례의 사전 서면 심사를 거쳐 엄선된 사례들이다.

앞서처럼 대상에는 ㈜금창이 수상의 영광을 안은 가운데, 최우수상은 FTA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조미김의 원산지증명 부담완화를 위해 관세청 및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아 증빙서류 간소화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주)장흥무산김’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EU의 반복적인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Real-time)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검증대응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주)쌍용자동차’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한편, 김종열 관세청차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동 행사가 FTA 활용 과정 중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오늘 발표대회에서 소개되는 성공 사례를 참고해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세청, 제4차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9월 27일 서울에서 한-EU FTA의 이행과 관련해 주한 EU 회원국 대사관과 EU 경제 유관기관 등의 FTA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세관 분야 이행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FTA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한-EU FTA 주요 화두인 인증 수출자, 원산지 검증 등과 관련된 이행 사례를 공유하고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나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FTA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무료로 배포하는 시스템이다.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또는 발급 신청, 증빙서류 보관·유통 기능을 제공하며, 현재 1만6000여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FTA-PASS와 상공회의소, 산업부의 관련 시스템 간 호환·연계 기능을 추가하는 등 FTA-PASS 사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FTA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FTA 주요 이슈에 대한 자국의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기관을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FTA 원산지 간편인정 확대

관세청은 10월 20일부터 김치 등 전통식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을 용이하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TA 간편인정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등 13종의 확인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농수축산물에 대한 FTA 활용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정되는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홍삼, 메주, 녹차 등 32개 품목이다.

지금까지 김치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산 입증을 위하여 배추, 무, 새우젓 등 각종 재료의 재배기록과 가공단계의 제조공정도 등 33여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이번 관세청 고시 확대로 전통식품 제조자 또는 수출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1장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광주본부세관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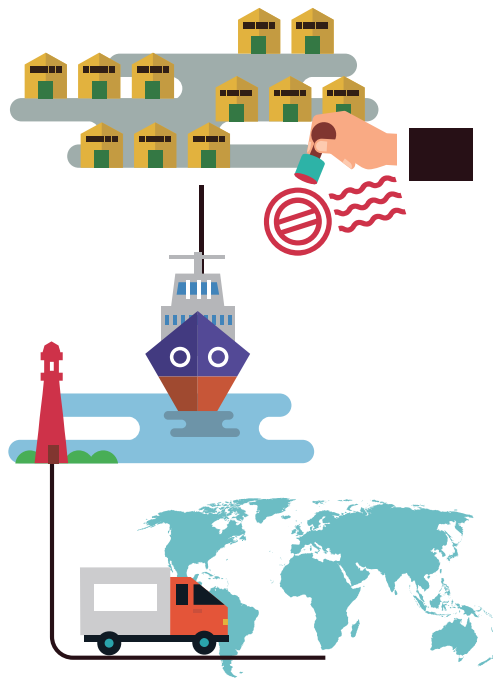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9월 18일부터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 15개 협정에 52개국과 FTA를 체결,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수출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국에서 FTA특혜가 배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수출기업들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지역 수출기업인 A업체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EU(스페인)측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어 광주세관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가 발행된 것이 밝혀져 업체는 광주세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고 또한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가 있다.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는 이같이 예상되는 상대국측 원산지검증 전에 세관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해 FTA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비스 희망 기업에 대해 상대국의 실제 검증절차대로 모의검증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자료보관 등 준비사항과 대응 노하우를 안내하는 컨설팅도 병행했다.



##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지난 9월 27일 개최했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중국에서 열린 이후 두번째다. 이날 양측은 영상회의로 한-중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운영 및 최근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기술규제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최근 중국내 제개정 활동이 활발한 ‘사이버보안’ 규제 관련,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통보 및 절차 준수와 규제 정보 등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및 동물용 의약품 분야의 중국 기술규제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도 요청했다. 이밖에 공산품 위해도 관리방법,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등 관련 중국의 기술규제 세부정보도 문의했다.

